

광주, 일자리·친환경차 ... 전남, 기업유치·에너지 신산업 성과

광주시

민선 6기 광주시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였다. 저성장과 청년실업 및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이 광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기틀은 마련됐지만, 새 정부의 든든한 예산 지원 등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청년정책·비정규직의 정규직화=윤장현 시장은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에 집중했고, 청년들과의 수많은 토론을 거쳐 청년드림사업, 구직장년 교통카드 지원 등 광주형 청년수당제도를 탄생시켰다.

특히 청년창업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아이플렉스(I-PLEX) 광주, 청년창업펀드,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을 통해 청년창업의 전 주기 생태계를 만든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청년수당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다.

사회적 격차 심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도 선제적 대응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최저임금보다



윤장현 광주시장.

청년드림사업 등 최우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양극화 해소

3대 미래 먹거리 기반 닦아

30% 더 지급하는 생활임금제 등은 한발 앞선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3대 미래먹거리로 산업지형 변화=

광주의 산업지형이 신산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도 최대 성과로 꼽힌다.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콘텐츠산업 중심으로 광주의 산업지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100만대 완성차 도시 조성에서 궤도를 수정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일각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깨고 지난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이다. 다만 애초 예산 규모나 사업 내용, 의미 등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만큼 남은 임기 1년동안 새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 인프라 확대 등 사업규모를 키워나가는 과제가 남아있다.

에너지밸리 국가산단 착공, 제2 지방산단 조성사업 추진과 문화를 통한 도시의 활성화, 경쟁력 제고도 3년의 변화다. 송암공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과 아시아문화전당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를 조성한 것이 그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일자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있는 일자리(기업)는 지키거나 늘리고(기업유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세 축으로 진행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고용시장과 노동 생태계 문제에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각계 22개 단체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기치로 내걸었던 민선 6기 전남도는 투자 유치와 청년 일자리 마련 실적에서는 높은 성적을 냈다.

전남도는 지난 3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의 바람을 토대로 남은 1년간 '좋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가속화', '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 등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신산업을 전남의 신규 기간산업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밸리 조성, 한전공대 설립 등을 추진한 것은 적절했다고 자평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전남도가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은 분야는 투자유치다. 201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남도는 787개 기업과 12조638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476개 기업이 4조6538억원을 투자해 1만595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협약 기업들이 약속대로 투자를 이행한다면 5만37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설비자동화, 구직·구인 미스매치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고용률은 지난 2014년 51.6%에서 53.4%로, 청년취업자 수는 39만8000명에서 41만5000명으로, 각각 1.8%p, 1만7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에너지신산업클러스터 구축=전남도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에너지기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787개 기업 12조원 협약

1만6000여개 일자리 창출

'가고 싶은 섬' 등 사업 보완

항공·드론 권역별 특화 추진

업 유치와 정부 에너지신산업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까지 200개 기업을 유치해 117개 업체가 이미 투자를 실현했다. 지난해 6월 에너지기술실증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지난 2월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을 착공해 기반시설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한전공대 설립도 지역대학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으로부터 1조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여수 경도(2.13㎢)의 광양만 권역제자유구역 편입, 서남해안 기업도시 공유수면 토지화 실현, 자동차 튜닝 부품 생산기반 구축, 생물의약품·항공·드론 등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

◇전남도 브랜드 사업=민선 6기 브랜드 사업인 '숲 속의 전남', '가고 싶은 섬',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은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강진 가우도 등 섬의 특성을 살린 주민 주도형 '가고 싶은 섬' 가우기로 섬 가치를 높이고, 여행객 편의 제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섬 가우기 고도화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전남에 '1억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5월까지 2938만 그루를 식재했으며, 전라도 천년 가로수 길(영광~장흥) 30.1km를 조성하기도 했다.

민선 6기 하반기 내용은 남도문예 르네상스는 2016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제수목화비엔날레 등 4개 분야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도 상생 현안 과제는

광주·전남의 민선 6기와 그 이전을 차별화할 수 있는 상징은 단연 '상생'이다. 상생 선포 이후 3년이 지나면서 광주전남연구원 출범 등 일부 과제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군공항이나 민간공항 이전 등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이 상생의 기본 원칙만 공감했을 뿐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와 지역민의 공감대 마련,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와의 조율 등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광주·전남이 안고 있는 공동현안의 '원샷'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한전공대와 에너지밸리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민선자치시대 단체장이 지

군공항 이전·한전공대·에너지밸리 등 통큰 협의 시급

깊이있는 대화·지역민 공감대 소극적

첨예한 문제 내부적 '갈등' 부인 못해

광주전남연구원 출범 등 일부는 성과

역민의 눈치를 보면서 현안 해결이 지연되고 그에 대한 부담은 다음 세대가 짊어지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이전 후 부지를 무안, 영암, 해남 2곳 등 4곳으로 한정해 조만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전

남도는 일단 지역주민, 지자체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민간공항의 이전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이다.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이 광주공항

의 국내선을 넘겨받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노선에 포함되면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한전공대와 한전 에너지밸리연구개발센터 등의 부지를 놓고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남은 한전이 자리한 빛가람혁신도시에 이들 연구·인력양성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광주는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의 열매를 전남이 독점하려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시·도가 군 공항과 민간공

항 이전, 한전공대 등 에너지밸리사업 전반에 대해 상호 배려와 분담을 기본원칙으로 해 대타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 합의에 도달한 방안에 대해 시·도가 지역 내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정부부처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간다면 광주·전남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거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내놓아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이자 에너지산업의 핵심인 한국전력을 유치한 것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모든 시·도가 한전 유치에 나섰지만,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곳은 광주·전남이 유일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선공'에 한전을 빛가람혁신도시에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한 대학 교수는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스마트에너지시티를 건설하겠다는 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신에너지산업을 지어만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며 "상호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지역 틀 안에 묶여 있는 현안을 한 번에 타결했다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분양 전환 아파트 24/35 PY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